

##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제교육 : 새로운 경제교육의 방향

김 응 현

부천부흥중학교

### I. 들어가며

변화하고 있는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해석이 중요하다. 먼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시대·사회적 변화 요인이다. 지식기반사회, 지식기반경제, 지식정보사회 등 그 이름을 달리하여도 현 시대의 변화의 총체적 특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강창동, 2003:30). 둘째, 교과 내용의 원천인 모 학문의 변화 요인이다. 신경제, 디지털 경제, 정보 경제 등으로 불리어 지는 지식기반경제는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기초한 지식 축적을 통한 수확 체증을 강조하는 신성장이론이나 개개인의 인적 자본 투자의 주체를 강조하는 인적자본론 등 경제 원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인간의 합리성에 전제로 하는 기존 주류 경제학의 비판을 포함한 행동 경제학, 경제 심리학, 생태 경제학 등도 지식기반사회의 경제 특성을 포함하여 이를 설명하는 원리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교과교육학의 변화 요인이다. 모학문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교과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모학문의 학문적 전통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특정한 내용지식의 구조를 학습자를 고려하여 전달하는 교수내용지식에 초점을 두거나 모학문의 학문적 전통을 깨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하는 등 교과교육의 변화가 그것이다. 넷째,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 현장 요구이다. 지식기반사회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게도 열린 교육관과 학교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수동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로서의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적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실천가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거침없이 요구하는 수요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 요인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경제 과목이나 경제 수업에 대해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은 사회과의 여러 선택 영역 중 경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 교과서를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 유용하지만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한 과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제 과목은 학생들만 어려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들 역시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과의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박형준, 2001:167).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시대와 사회는 점점 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맞는 학교 경제교육은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경제 교과서는 변화하였다. 최근의 개정 과정에서는 금융교육이 강조되어 이 부분이 교육과정  
에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회소성으로 시작되는 경제 교육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배  
우고 가르치고 있는 경제교육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의 경제 교육은 아닌지, 이론이라는 것도 현실과 동떨  
어진 이론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새로운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  
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시대·사회적 변화 요인, 모 학문의 변화 요인, 교과교육학의 변화 요인, 교육 현장의 변화 요인으  
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와 지식기반경제의 형성과 같은  
시대·사회적 변화와 교과교육학과 경제학 등의 경제 교육 관련 학문의 관점과 내용의 변화는 교육  
현장의 변화의 요구에 더불어 학교 경제 교육 활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상과 그에 부합되는 시민  
성의 모색을 요청되고 있다.

## II.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제학 지평의 확대

### 1. 기존 경제 패러다임

경제학계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며 경제학을 이끌어 온 경제학과 또는 경제학설을 일컫어  
주류경제학이라 한다. 통상 애덤스미스의 고전학파에서 한계효용학과, 신고전학과, 그리고 케인즈학파로 이  
어지는 경제학의 흐름을 주류경제학이라고 한다. 특히 현대 경제학의 주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반에 등장해 자리 잡은 한 학파, 즉 신고전학파이다. 제본스, 멩거, 왈라스의 한계 효용 이론에 토대를 두  
고 시작되어 알프레드 마샬 등에 의해 기초가 완성된 신고전과 경제학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목표로 잡  
고 고전 역학처럼 현상을 기술하는 함수와 방정식으로 수학적으로 탐구했다. 하나의 분과였던 이 학파는  
어느새 경제학과 동의어가 되었다(김원기, 2011:357). 이 신고전학파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적 인간, 호  
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는 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고,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될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익이 될 행동이라면 서슴지 않고 해치워버린다. 마치 신  
과 같은 이러한 인물이 주류경제학에서 전제로 하는 경제인의 모습이다(Norio Tomono, 2006:25). 이 완  
벽한 경제적 인간은 선호가 체계적이며, 안정적<sup>1)</sup>이고, 계산 능력이 탁월하여 자신 앞에 놓은 선택 대안들  
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 체계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효용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한진수, 2007:264).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있어야 개  
인적 이익 추구가 시장 가격에 의해서 자동 조절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sup>2)</sup>와 맞물려

1)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여러 대안적 행동의 집합으로부터 모든 가능한 행위들의 귀결을 결정하고 각 귀결은 개연성과 효  
용성을 계산하고, 각 행동의 기대효용을 계산한 다음,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최종 선택한다는 전략을 말한다(정병훈,  
2007:230).

2)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어 사회는 각 개인이  
기능적으로 얽혀져 있으므로 각 개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산술적으로 합하면 경제의 운영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  
각이 깔려 있다.

도표와 수학적 형식으로 구성된 경제학의 학문적 체계를 통해 인간사회를 분석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는 최적화와 균형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틀에 의해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신고전학파의 방법적 틀은 최적화가 실현되어 있다고 하는 주체 균형과 가격 조절에 의한 수급의 일치라는 가격 균형의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임의 상정된 가격 체제가 가격 체제 하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한다. 임의의 가격 체계에서 이러한 행동이 성립된다고 상정함으로써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두 가지 함수가 구성된다. 어떤 적당한 가격 체계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하여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값이 일치하거나, 적어도 공급이 수요를 상회한다. 경제에서는 이러한 균형 가격을 자동적으로 발견하는 시스템이 있어 현실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 가격과 가까운 곳에서 교환이 성립된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이것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구성 문제라고 부른다. 이들 함수의 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효용 최대화 문제를 풀어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가정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이런 문제를 풀어서 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전능의 합리적 경제인, 요컨대 무한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생산자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이윤 최대화를 가정한다. 그 가정으로부터 공급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 한계 비용 증대라는 가정을 놓아야 한다(Yoshinori Shiozawa, 1997:204-205). 이처럼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경제학은 몇 가지 가정을 한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명확한 좋고 싫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선호 순위에서도 숫자 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질서 정연한 서열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경제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서 고려하는 모든 대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여 가장 큰 가치(효용)가 큰 대상을 선택하는 인간을 가정한다(Norio Tomono, 2006:5). 신고전학파의 경제적 인간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마치~인 것처럼(as if)' 행동한다. 합리적 가정은 주체가 합리적일 필요는 없고 '마치~인 것처럼(as if)'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선택한 것처럼 간주하면 되므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가정 아래 이론 모델을 수립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론 모델의 타당성 여부는 그 예측 가능성, 즉 그 이론 모델을 통해 경제나 경제 행동에 관한 적절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제 그 자체의 실현 타당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예측 결과가 좋으면 가정의 현실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첫째는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다. 앞서 제기한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지니게 된다. 둘째는 조건에 대한 가정이다. “만약~ 하다면”과 같은 일정한 조건 내에서 경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조건적 제약을 주어 그 가정 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정(If)경제학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내재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가르친다. 가격 변화는 작고 무작위적이며 시장의 요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처리된다(김원기, 2011:82).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해 잘 조정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은 오늘날 현실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능한 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에 따라 조절하고 해결되도록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 개입에 반대하고 국가 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국가의 부를 확대시켜 사회적 복지를 극대

화한다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노선을 이어받았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던 고전적 자유주의로 그대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반대한다. 경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유일한 질서로 간주하고 세계 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힘있는 국가는 새로 형성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를 지배한다(홍용희, 2012:139). 신자유주의는 그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개인적 이익 추구가 시장 가격기구에 의해 자동 조절된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최적화와 균형의 논리, 합리적 경제인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 2.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980년대 들어 주류경제학은 이론 자체의 문제점과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주류경제학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경제학적 접근 방식<sup>3)</sup>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박만섭, 2005:3). 경제학이 실제로 세상을 작동시키거나 예측하는 데는 왜 실패한 것일까? 주류경제학자들이 믿고 있거나 선전하는 근본적인 전제들이 잘못되었다. 주류경제학 자체의 토대가 애초부터 오류라는 강력한 비판이다(김원기, 2011:359).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홍준(1994:31-43)은 신고전과 경제학의 이론적 가정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효용(선호)의 안정성 가정이다. 경제인은 일관된 선호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효용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가정이다. 둘째, 경제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성 가정이다. 경제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계산적으로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된다. 셋째, 원자화된 행위주체의 가정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모든 행위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의 기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개별성의 가정이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신고전과 경제학이 옹호하면서 곧 경제학 이론의 도구주의적 해석을 수반한다. 이론의 진위는 논의는 무의미하고, 이론은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사회현상의 법칙이란 개개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행위를 넘어선 어떤 사회적 집합체의 존재나 그 실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앞서 규정한 가정(If)경제학은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각종 가정과 조건으로 규정하여 접근하기에 현실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제 문제가 인간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선택의 다양성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3) 경제학의 지평은 주류경제학이 정의하는 것보다 더 넓다. 일반적으로 비주류경제학이라고 이론들은 제도경제학, 사회경제학,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신오스트리아학파,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 구조주의 경제학, 스라피언 경제학, 맑스주의 경제학, 급진적 정치경제학, 조절이론 등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주류경제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화경제학이나 신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그것이다. 주류경제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중요한 점은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박만섭, 2005:11). 비주류경제학은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므로 하나의 통일된 이론체계로 통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주류 경제학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으며, 주류경제학에서 중점을 두지 않는 정치 및 사회문제를 경제분석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보편타당한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비주류경제학에서는 시대상황이나 경제여건과 같은 개별성을 중요시한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항상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인간의 심리가 포함된 보다 현실적인 경제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주류경제학은 경제 주체의 개인적 이익추구가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가져오게 된다는 주류경제학의 기반을 비판한다. 주류경제학에 대하여 그 기본전제 및 현실적합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론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 반론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제행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행위들이 항상 합리적일 순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이성만 있으면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경제학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감성도 있다. 이러한 감성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따라서 경제심리학은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심리학과 연결하여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심리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행동경제학은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을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깨닫고 나타난 행동경제학은 인간 행동의 실제, 원인,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에 관해 체계적 규명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주류경제학 이론으로 해결이 되지 못한 사회적 문제가 속속 발생함에 따라 단순한 학문적 지식의 축적이 아닌 실증, 이론, 정책이라는 경제학이 대상으로 삼는 모든 영역에 새로운 초점을 맞춰 지고 있다. 단순한 독자적 학문 체계의 구축이 아닌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학문, 특히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등 광범위한 학문에서 서로 영향과 시사점을 주고받는 학제적이고 협업적인 학문으로 발전되고 있다. 학제적인 학문적 접근을 통해야만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학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인간 사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학문으로서 경제학에서의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나아가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기존의 경제활동의 원리와 구분되는 새로운 경제활동 양상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식기반경제, 신경제, 네트워크경제, 인터넷 경제, 사이버경제, E-경제 등의 다양한 신조어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용어들은 지식기반경제와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지식기반경제는 신경제(new economy), 디지털 경제 등 최근에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란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풍부한 지식의 생성과 신속한 유통 및 손쉬운 활용에 의해 노동이나 지식이 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4.0<sup>4)</sup>은 따뜻한 자본주의, 감성적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정부가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성이 지닌 부분들의 시장주도로 인하여 기업 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지는 것, 기업과 근로자간의 서로 경쟁관계로 얽혀있던 모습을 벗어나 보다 근로자의 만족스러운 복지와 더불어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의 능력을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 이러한 모습

4) 자본주의 1.0은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2.0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3.0은 신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이 하나가 아닌 큰 것이 작은 것들을 잡아먹는 정글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공존해가면서 살아가는 숲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간의 공생관계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가능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분배를 주장한다. 이는 기업가들이 지나야 할 기업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기부문화 형성을 통하여 자본들의 소득분배, 아래로부터 오는 경제의 반영과 사회적인 기업이미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장려하는 절세 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의 밝은 사회 기여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의 기업적인 감성적 자본주의가 현재 자본주의4.0의 가장 대표되는 모습이다(홍용희, 2012:132).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경쟁 과열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간 소외와 일부 자본가들에게 자본이 집약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차가운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에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 Ⅲ. 경제적 인간과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대립적 관점

#### 1. 무한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우리는 대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의 전제 위에 개인의 삶이 존재하고 사회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다. 기존의 경제이론인 주류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다. 현대 주류경제학 모델은 경제적 동물관을 기초로 한다. 즉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추구하는 자율적이고 원자화된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된다(유홍준, 1994:30). 주류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한다고 믿었다. 또한 효용과 평균적 인간의 개념으로 무장한 신고전파 경제학들은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몇몇 개인들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인간이며 그는 항상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경제학은 방정식에 기초한 상세한 수학적 모형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김원기, 2011:155). 주류경제학이 전제로 하는 인간상인 경제적 인간은 인지나 판단에 관해 완전히 합리적이며, 의지가 굳고, 오직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경제적 인간은 지각, 주의, 기억, 지론, 계산, 판단 등 뇌나 마음이 실행하는 인지작업에 관해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단 결심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초월적 자제력을 갖춘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Norio Tomono, 2006:29-30). 종래의 경제학, 정확히 말하면 신고전파 경제학은 인간에게는 무한의 합리성과 무한의 추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Yoshinori Shiozawa, 1997:7). 신고전파 경제학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완전 합리성)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완전 자제성), 자신의 목표 함수를 극대화하려는(완전 이기성) 경제적 인간들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합리성은 오랫동안 경제학의 표준 틀/framework로서 자리잡아 왔다(한진수, 2007:264). 신적 합리성(Demons Rationality)에서 신적이라는 것은 인간, 동물, 인공지능의 모델이 환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 혹은 완전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최적화 계산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의 의

미한다. 주류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간상인 경제적 인간은 완전 합리성, 무한 합리성, 무한 추론 능력을 갖춘 이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인간의 판단 능력이 결코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이다.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더라도 사안이 지극히 복잡성을 띄고 정보가 불완전하고 더욱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으로 발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주진열, 2007:289). 경제학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드는 다음 단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 행위자들은 입수 가능한 정보에 만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전 지구적인 천리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추론이 아니라 어렵짐작으로 판단한다. 또한 어떤 경우엔 합리적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그때 그때의 상황이나 또 다른 행위자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신고전파 모형의 이론 틀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그것은 완전한 시장을 수학적으로 우아하게 재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김원기, 2011:173). 특히 심리학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실험 상황을 잘 모르고, 때로는 옳은 반응에 대한 유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을 특정 영역의 경험을 얻으면서 그에 따른 학습을 통하여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논의한다. 이 효과에 관한 증거가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David Hardman, 2009:4). Herbert Simon(1956)은 조직의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제안 하였으며, 이것은 마음이 진화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내놓은 지름길 방략이라고 하였다(David Hardman, 2009:6, 한진수, 2007:265, 주진열 2007:289). 인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본능이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오래 전의 것이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교수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준합리적 경제이론<sup>5)</sup>’을 내세워 인간의 통념을 무너뜨렸다(Norio Tomono, 2006:11).

주류경제학의 과도한 합리성에 대한 가정에 비해 비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유한한 능력을 지닌 현실적인 존재로 상정한다. 따라서 완전 합리성이나 무한 합리성을 지닌 존재 아닌 제한적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기보다는 비합리적 존재로 인정하기까지 한다. 물론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비합리적인 존재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아니다. 주류경제학에서의 완전 합리성에 대한 반대의 차원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맹신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한적 합리성, 비합리성, 준합리성 등의 용어가 다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이 때로는 합리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비합리적 행동을 하기도 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연구자는 이를 ‘반(半)합리성’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 2. 완벽한 선택과 비일관된 선택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이 실성하지 않은 이상 사람

5) 비합리적 선택들이 개별 경제 주체의 차원에서는 가벼운 왜곡이나 잠을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수많은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누적된다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규모의 오차가 된다. 일부 경제 주체들의 준합리성(near rationality)에 의한 조그마한 비극대화 행동이 상당한 경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한진수, 2007:279-280).

들이 대체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항상 보편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고전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이 전형적인 것이었으나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은 중세 암흑시대에 대개 증발해버렸다. 중세에 그 신념을 대체한 것은 사람은 신아에 따라서 나아가 정도는 덜하지만 정서에 따라서도 행동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며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부활 시킨 장본인은 데카르트였다. 인간이 명백한 분별력과 추론 능력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태제는 오늘날까지도 인문주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최근까지도 철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인간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Stuart Sutherland, 2007:16).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세계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대범한 통찰로부터 시작된다. 한 마디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학문을 이미 알고 있다. 경제학은 선택의 과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 공식들을 배운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체로 이 공식들을 따른다. 간혹 현실이 그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공식들이 합리적인 선택의 원칙이란 걸 알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설명과 예측, 그리고 지침이 되어주는 이 법칙들을 이해하려면 수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원칙인 수요·공급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만 알아도 세상을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다(김원기, 2011:358) 인간의 선택에 대해 경제학은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선택'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Norio Tomono, 2006:5). 가정(If)경제학으로 규정한 기존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전제 하에 접근을 하였기에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맹신한다. 이성과 논리의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기에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항상 올바르게 바람직하며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또 다른 가정을 하게 된다.

누구나 때로는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복잡한 결정일수록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서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좀더 명백한 증거를 찾을 때 대개 완전히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곤 한다. 오직 자신들이 이미 품고 있는 신념을 뒷받침해 줄 증거만 찾기 때문이다(Stuart Sutherland, 2007:17). 이러한 신념이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게 하고 비일관된 선택을 하게 한다. 주류경제학자들은 경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성과 논리에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종종 주변 사람들, 광고,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무작위적인 충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원기, 2011:148). 심리학에서는 실제적인 인간을 연구한다. 때로는 무엇이 좋은지도 명확하지 않고, 가끔은 '비일관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계산도 그리 정확하지 않고, 게다가 한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의 인간을 연구한다(Norio Tomono, 2006:5)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창조물에 대해 애착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점을 갖는 행위 등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진 비이성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의 비이성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완벽하게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불완전성의 효과를 이해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가진 몇몇 한계 속에서도 우리의 불완전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Dan Ariely, 2010:433-434). 인간의 이성적 존재로 한정하지 않고 비이성적 존재라

는 측면을 인정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충분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이성적 행동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완벽한 선택이 아닌 비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가슴

경제적 인간에게는 합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된다. 타인에 대해서는 일절 돌보지 않고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최대화하려는 이기적 인간이라는 점이다.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일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행동은 어떤 보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인간에게는 윤리나 도덕이라는 개념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 인간은 사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범죄가 아닌 한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인간이다. 경제적 인간은 법을 지키지만 법의 틀을 벗어나는 윤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Norio Tomono, 2006:31). 뉴턴 이래 요소환원론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을 분절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복잡한 체계, 복잡한 시스템에는 이러한 방법론에서 누락시켜 버린 많은 것들이 있다(Yoshinori Shiozawa, 1997:5). 신자유주의 등 경쟁을 강조하는 기존의 경제의 흐름은 냉철한 시장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 내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 살벌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차가운 이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는 감성으로 움직인다. 경제 행동도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경제상황도 직감으로 파악하는 예는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경제가 오로지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마음은 동정심이나 상냥함, 또는 인간성 따위를 뜻하는 것도, 도덕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각, 인지, 기억, 판단, 결정, 감정, 의지, 동기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트(heart)라기보다는 마인드(mind)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마음은 합리적인 추론은 물론 계산을 하며, 감정이나 직감도 낳는다. 마음이 인간행동을 결정하고 인간 행동이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는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Norio Tomono, 2006:16). 제도나 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호혜적 인간의 존재가 경제적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인간이 호혜적 인간을 경제적 인간처럼 행동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경제적 인간의 존재만을 전제로 하는 주류경제학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Norio Tomono, 2006:258). 경제에는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다. 빈곤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산업 전환의 문제 또는 그에 따른 실업의 문제, 기업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의 문제, 경제 만능적인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는 등은 경제학이 유니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나 사회가 단순한 것은 아니다. 경제의 복잡함과 경제 문제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종래 파악되어 온 경제인이라는 인간상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전지 전능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부터 한계가 있는 능력 안에서 어떻게든 보다 좋은 결과를 추구하며 행동하는 인간으로 인간상을 전환하는 것이다(Yoshinori Shiozawa, 1997:208). 이러한 인간상의 전환이 있어야 경제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따뜻한 경제학으로의 접근 가능성이 열린다.

#### Ⅳ.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제교육의 함의

##### 1. '닫힌' 경제적 합리성에서 '열린' 경제적 합리성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학교 경제교육은 인간의 이성을 무한하게 신뢰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경제인상을 추구하여 무한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에 인간의 선택은 항상 일관되고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또다른 전제를 지니게 된다. 기존 경제학에서 그리고 기존 학교 경제교육에서 바라본 경제적 합리성은 인간의 삶과 분절되고 닫혀 있다.

먼저, 호모 이코노미쿠라는 경제인은 개인적 합리성만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만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이라고 볼될 수 있지,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는 합리성의 담지가 될 수 없다(이남인, 2005):37). 모든 개인만이 무한 합리성을 지니고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닫힌' 경제적 합리성 하에서 완벽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당연히 합리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과는 달리 사회적 합리성은 배제되고 개인적 합리성만을 인정하게 된다.

완전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모든 대안들 중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효용극대화의 원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면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화'가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행위자들이 여러 대안들 중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효용을 제공해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차조일, 2008:157). 이성, 일관성, 합리성에 분절된 '닫힌' 경제적 합리성은 변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분명 이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비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 합리성은 선택과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전제와 의사 결정 주체 간의 상호합의와 인지 가능성 요건이 전제되어야 가능해 진다고 본다. 즉 상호 합의와 합의에 따른 이익의 신뢰, 그리고 인지 가능성 조건이 전제될 때 개인적 합리성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개인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사회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상호 합의를 위한 판단과 선택은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이익을 신뢰하고 당사자간의 의사결정 행위가 예측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인 여건이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김왕근, 2000:37).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사회는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결과에 빠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합리적 개인, 비합리적 사회가 이론상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심각한 현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범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문제이며 합리적 개인, 비합리적 사회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이정진, 2004:34). 개인만이 합리적이다 혹은 비합리적이라고 볼될 수 있을 뿐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우리의 상식적인 직관과도 거리가 멀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다 혹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이남인, 2005:44). 경제교육에서 개인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사회가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사회 조건 하에서 분리된 개인으로부터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판단과 선택을 강조해야 한다.

즉,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인간의 비일관된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기존 주류경제학의 시각과 비주류경제학의 시각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성, 일관성, 합리성에 분절된 ‘단편’ 경제적 합리성에서 비이성, 비일관성, 비합리성과 통합된 ‘열린’ 경제적 합리성으로 전제가 변화되어야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가능하고 현실적인 경제교육이 가능하다.

## 2. ‘의사결정·선택형’ 경제인에서 ‘의사소통·사회참여형’ 경제인으로

일상적인 선택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위의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 하며 이 중에서 도구적 합리성<sup>6)</sup>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도구적 합리성은 경제의 영역에 적용되는 도구적 합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경제의 영역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차조일, 2008:49).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에 치우치다보니 기존 경제학과 경제교육은 이성의 차가운 측면만을 강조하며 차가운 이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규정한다. 차가운 이성을 지닌 인간의 의사결정을 냉철한 시각이라는 이유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경제교육은 차가운 이성을 지닌 ‘의사결정·선택형’ 경제인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성을 규범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으로 구분<sup>7)</sup>(김왕근, 2000:41-42)해서 살펴보면, 사회과교육에서 추구하는 시민성은 공동체 의식, 법의식 등 규범적 관점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경제교육에서의 합리성은 선택과 판단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인지적 관점에 중점을 두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교육에서의 합리성은 인지적 합리성에 그쳐 규범적 시민성과 더불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조차도 기본적으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타인을 전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집단의 공동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타인에게 끼칠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결정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전제되거나 개입된다(배영호 외, 2009:37).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특수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인간 관계 속에 내재하는 다양한 관심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규정적 원칙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의사결정보다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더욱 우선적 사안으로 부각된다(공병해, 2007:102 재인용). 학교 경제교육이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 선택, 합리적 의사결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실천과 행동, 사회 참여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상호의존성 때문에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가와 근로자, 정부와 시민은 서로 협력해야 하고 경제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6) 도구적 합리성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내고 선택하는 능력’(Dryzek, 1990:3-4) 혹은 ‘이미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수단 선택과정과 관련된 능력’(Friedman, 2001:54)으로 정의된다(차조일, 2008:22).

7) 시민성은 규범적 성격을 지닌 시민성과 인지적 성격을 지닌 시민성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옳음과 나쁨을 구별해 주는 규범적 기준에 따라 도덕성을 규정하는 반면, 후자는 옳음과 그름을 구별해 주는 판단 형식에 따라 시민성을 규정한다. 예컨대, 정직, 타인의 고려, 자유, 애국심 등과 같은 사회적 관례나 실행, 덕목 등을 규범적 시민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문제가 되는 사태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인지적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김왕근, 2000:50).

깊이 이해해야 한다. 흔히 경제적 정의와 윤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조영달, 1997:173).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경제활동의 도덕적 접근, 경제 정의, 경제 윤리를 포함한다.

인간은 차가운 이성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존재이다. 경제학에서의 차가운 이성은 냉철한 측면을 넘어 냉혹하기까지 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 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교육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한다. 찬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지닌 ‘의사소통·사회참여형’ 경제인의 모습이 반영된 경제교육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 V. 나오며

사회과교육과 경제교육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은 사회과교육의 한 영역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회과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에 하위 영역으로써 경제교육의 목표도 일치해야 한다. 사회과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경제교육의 목표가 일치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제학 중심 경제교육은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서의 경제학의 구조조차도 충실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경제학 중심의 경제교육을 통해 의도한 경제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보다 포괄적인 목표로서의 경제적 시민성 양성에 충분히 기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김경모, 1998:46). 경제학 중심의 경제교육은 몇몇 소수의 학생들만이 학습 가능할 정도로 그 수준이 높고 다루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인 민주시민적 소양의 습득이라는 사회과 전체의 목표와도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경제학 중심의 경제교육은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바의 내용을 가르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한 경제적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궁극적인 경제교육의 목표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의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최충욱 외, 1994 재인용). 시민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록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 근거해서 시민성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다(김왕근, 2000:39). 경제학이라는 모학문의 영향이 큰 경제교육은 개인의 선택, 의사결정을 강조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과교육과 부정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사회과교육에서의 시민성과 경제교육에서의 경제적 시민성의 정합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창동(2003), 지식기반사회와 학교지식, 문음사  
 김경모(1998), 경제학의 구조, 경제적 사회화, 경제적 시민성,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와 교육 26권, pp.43-56  
 김왕근(2000), 시민의 정치 의식과 시민교육의 원리,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pp.31-53  
 김원기(2011), 경제학 혁명, 행성비  
 박만섭(2005), 신고전파에 대한 12대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이투스신서

- 박형준(2001), 경제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실험 경제학의 응용, 경제교육연구 제7호, pp.165-202
- 배영호, 남상준(2009), 미감적 차원의 사회과적 의미 탐색: 합리성의 확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pp.31-47
- 이남인(2005), 경제적 합리성의 철학적 반성,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53권, pp.33-63
- 이정진(2004), 합리적인 개인, 비합리적인 사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19권, pp.33-81
- 유홍준(1994), 주류경제학의 한계와 신경경제사회학 패러다임을 통한 극복,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33권 1호, pp.27-49
- 정병훈(2007), 과학적 합리성의 자연화: 제한적 합리성의 의의와 한계,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79권, pp.223-252
- 조영달(1997), 한국 시장경제의 성장과 시민성의 과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와교육 24권, pp.155-176
- 주진열(2007), 리스크의 법적 측면: 제한적 합리성,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9권 2-1호, pp.285-325
- 차조일(2008), 사회과교육과 합리성, 한국학술정보
- 한진수(2007), 선택의 제한적 합리성과 경제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39권 3호, pp.263-284
- 홍용희(2012), 자본주의 4.0 시대의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86권 pp.131-167
- Barr, Barth, Shermis(1978), *The Nature of Social Studies*, 최충욱·전홍대·조영제 역(1994), 사회과교육의 이해, 서원
- Dan Ariely(2010), *The upside of irrationality*, 김원호 역(2011), 경제심리학, 청림출판
- David Hardman(2009),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이영애·이나경 역(2012), 판단과 결정의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Norio Tomono(2006), *Kodo Keizaigaku: Keizaiha 'Kanjo' de Ugoiteru*, 이명희 역(2007), 행동경제학, 지형
- Stuart Sutherland(2007), *Irrationality*, 이세진 역(2008), 비합리성의 심리학, 교양인
- Yoshinori Shiozawa(1997), *Economics of Complex System*, 임채성 외 역(1999), 왜 복잡계 경제학인가, 푸른길